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5일까지... 환급금 내달 4일까지 조기지급

법인사업자 61만명은 오는 25일까지 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4월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고지 납부에 대해 안내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명은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미리채움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내달 4일까지 조기지급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 결과 탈루혐의가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도 전했다.

### 국세청장, 혁신 중소기업 신고확인 제외... 지원에 역량 집중

김창기 국세청장이 5일 항공기 부품 제조 등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등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및 경영난 등을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납세담보면제 특례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성장 세정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글로벌 경기둔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세정지원의 지원을 다각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현장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수도권 전매제한 10년→3년으로 줄어...

최장 10년에 달하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7일부터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돼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돼 국민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무 폐지에 대해서도, 이미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